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AEA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With Special Regard to Experiential Cases of IAEA

김태운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Tae-Woon Kim(taewoonkim1@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시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중심어 : | 국제기구 | 패권안정론 | 자유주의 | 현실주의 | IAEA | NPT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experiential cases of IAEA's formation and roles, based on the points of realist and liberalist paradigms that show different viewpoints o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any parts cannot be explained only with theoretical assumptions of liberalist paradigm,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unctional merits, game rules, interdependent interests and role independence. Especially as seen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cases of IAEA,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mainly motivated by the security of vested rights among powers and their roles may be changed, depending on the mutual policy objectives of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is respe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not seem to be strictly protected in independence or efficiency of their roles. Therefore, the liberalist hegemony stability theory is useful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keyword :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Hegemony Stability Theory | Liberalism | Realism | IAEA | NPT |

I. 서론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주의적 양상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북한 핵 문제 발생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이러한 문제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형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이론은 이를 국가간 협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1]. 그러나 자유주의 이론은 이를 국가간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론들의 고찰을 통해 IAEA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험적 측면에서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각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는 국제정치를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시야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북한을 비롯한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문제가 증대한 국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IAEA 및 NPT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급격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증대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평화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와 회원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IAEA라는 특정의 국제기구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패권안정론

현실주의 이론의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가정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대외 행위자로서의 국가, 패권, 자력구제의 원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투기디테스 이래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근대에 이르러 국제정치, 경제의 불안정,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패권안정론은 바로 이러한 현실주의 이론의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카(Carr)와 모겐소(Morgenthau)[2], 코헤인(Robert O. Keohane), 길핀(Robert R. Gilpin), 크라즈너(Stephen D. Krasner), 월츠(Kenneth N. Waltz) 등은 이론의 전통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제정치체제의 안정 또는 불안정을 국제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력배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일정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패권국가와 국제질서간의 상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들어와 미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를 우려하는 국제정치적, 경제적인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났다[3].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월남전 전개 과정이나 제1차 석유판동 당시 나타났던 미국의 무기력함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국제 경제적으로는 신보호주의적 무역질서의 강화 경향과 함께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는 등 제2차 대전 후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에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났다. 특히 국제통화 분야에서 무역질서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금태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를 기본구조로 하는 브레턴우즈체제가 월남전 및 “위대한 사

회적 프로그램” 등에 따른 미국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1976년에 이르러 붕괴된 것이다[4]. 이와 같이 미국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질서 변화와 더불어 독일과 일본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패권국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알려주는 전조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현실주의 계통의 국제정치학자들 간에는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약화와 국제정치, 경제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패권안정론의 태동 배경이자 시발점이다[5]. 특히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기존의 학자들이[6]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의 원인을 금융이나 통화정책에서 찾는 것과 달리 이를 패권국 부채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킨들버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또는 제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가 안정되었던 것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7]. 그러면서 국제정치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경제를 안정시킬 공공재의 제공과 장기적으로 자본을 대출할 수 있는 지도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킨들버거의 이같은 관점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현실주의 계통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코헤인의 패권안정론은 킨들버거의 가정과 유사하다. 코헤인은 킨들버거처럼 패권국이 대부분의 국가에게 공공재를 고루 제공한다는 점을 통해 패권체제 내에서 국제기구 등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코헤인은 패권국이 쇠퇴한 이후에도 패권 당시에 유지되었던 국가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킨들버거의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즉, 코헤인은 국제관계를 일회성 게임이 아닌 반복적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한번의 게임으로 끝나는 관계라면 ‘배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연속적 게임이라면 배반당한 행위자의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패권 후에도 국가간 협력의 유지가 가능하고, 국제제도와 질서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8].

길핀은 코헤인이나 킨들버거의 가정과는 차이를 보

인다. 즉 패권안정을 오직 패권국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9]. 이에 따라 공공재는 패권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되고, 패권국의 행위와 공공재 공급간의 관계는 선순환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패권국은 오직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패권국은 국제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으로부터 대가의 지불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기구가 유지되는 것은 패권국가의 경제적 능력 배부, 즉 선의의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힘의 배분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길핀은 인류 역사 이래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특정국가가 원하는 국제규범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르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정치·경제·군사 강대국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1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패권적 위치가 한동안 국제체제에서 상대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크라즈너 역시 길핀과 마찬가지로 패권국의 강제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에서 패권안정론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크라즈너는 패권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체제를 수립하지만 그것이 꼭 패권국의 이기적 이익으로만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권안정에서 패권이 힘과 이익으로 정의되지만, 패권국은 장단기적 이익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써 자신의 이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공공재를 여타 국가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패권국이 주도하는 개방된 자유무역체제는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가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국제정치, 경제체제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패권안정 이론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정은 다소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제질서라는 것이 전적으로 패권국의 존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과 그 역할에 관한

설명도 국가간 힘의 분배 상태에 두고, 국제기구 등에 의한 국제협력은 한 국가가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는 패권적 질서에 의해 가능하며, 여기서 국제기구는 패권국이 국가이익의 확대 차원에서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11]. 앞서 언급했던 킨들버거의 주장처럼 패권국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국익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자본을 대출하듯이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공공재라는 것이다[12]. 국제기구가 이와 같은 요인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운영은 전적으로 패권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국제기구의 본질은 패권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패권국은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로 타국에 대해 공공재를 제공하지만 강제적인 힘을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하기도 한다. 중요한 예로 공공재의 제공 방법이 효과 없을 경우 경제봉쇄 또는 무력사용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2. 자유주의 패러다임

현실주의자들이 인간성을 홉스적으로 간주한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칸트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이성이나 합리적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인간이 비록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이지만, 협력적인 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등과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기본 가정에 따라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을 중시한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국가만을 대외 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외 행동에 있어서 국가 중심성을 거부하고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이 점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의 관점은 '다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들은 권력과 같은 문제보다는 안락과 행복을 위한 국가간 협력관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

치 이론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같은 가정에 입각하여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관점

기능주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이론 가운데 하나로써, 1943년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A Working Peace System' 을 통하여 이론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트라니는 이상주의가 제창했던 제도들을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이들과는 다른 현실성 있는 국제기구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방주의(federalism) 이론적 접근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들이 국가의 주권을 넘어설지도 모를 연방 설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며, 설사 연방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연방간의 경쟁으로 인한 분열 발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트라니는 국가주권의 문제와 별 상관 없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비정치적 기능을 위주로 협력한 후 장기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식의 기능주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점증하는 문제 영역에서 개개의 정부가 국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국가간 상호의존의 증가 등과 관련지어 국제기구 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중앙권위체제 부재, 국가간 정보의 불완전성, 거래비용의 증가는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8], 이같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라고 하였다. 즉, 국제기구를 이같은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그는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써, 국제기구의 다자적(multilateral) 구조를 들고 있다[8].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국가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능주의 이론은 국제기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여건들이 성숙될 때 국제기구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독립적인 역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역할은 기구의 기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국제기구는 관련국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 존속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별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규칙에 따르는 것은 규칙위반에 대한 손실 우려의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비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협력하는 데서 발생하는 장기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는 다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정 국가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의해 보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국가들은 국제기구 규칙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기구는 특정국가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2 상호의존론적 관점

상호의존 이론은 1977년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e)의 '권력과 상호의존 : 전환기의 세계정치(Power and Interdependence : World Politics in Transition)'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15]. 이들은 국제정치 현실이 전통적 현실주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접근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안보문제를 상위에 놓고 경제적 쟁점을 하위로 분류시켰던 현실주의의 '쟁점의 서열화'를 배격했다[15]. 따라서 이들이 주목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비국가 행위주체들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와 미국의 영향력 감소였다.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가중심의 국제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되자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초국가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되었으며 특히, 비군사적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코헤인과 나이의 상호의존 이론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비판과 수정을 가하는 것이었다. 상호의존 이론이 상정하는

국제기구 모델과 그 역할에서는 초국가적 연계망을 통한 국가간 연합이 국제기구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현실주의 이론의 주장처럼 국제기구에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기구는 강대국이 임의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규범의 측면에서 강대국들에 대한 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의존 이론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약소국들간 연계가 의제를 설정하고 제후형성에 기여하며, 또한 쟁점을 위한 기구 토론장과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투표의 동원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약소국 정치활동무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15]. 상호의존 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 역할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3 신자유주의의 게임이론적 접근

'신자유주의' 이론도 현실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특성을 무정부적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와는 달리, 무정부 상태를 국가간 게임규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핵심체의 부재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체의 부재가 곧 국가간 관계에서 상호배신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핵심체가 존재한다면 국가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패권국의 권력 지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는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의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16].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해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정에 입각하여 국제기구의 형성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제기구의 형성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합리적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는 국제체제의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 거래비용 등의 발생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국제기구나 레짐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곧,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이같은 국제기구나 레짐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즉,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 형성을 전략적인 게임이론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를 국가간 협력의 장애를 제거하는 주요 기제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코헤인은 제도(Institutions)나 국제기구를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호간을 이어주는 규칙 또는 관행으로 정의하였다. 곧, 국제기구는 국제행위자의 역할을 규정해 주는 것은 물론, 행동상의 제약, 행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보았다[17].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 '규칙의 강제 기능',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절감 기능, 정보공유를 통한 불확실성 감소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 기능의 분류는 코헤인의 '계약주의 국제레짐' 혹은 '기능주의 레짐'에 따른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자들은 특정 조직의 규범이 국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정보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가간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18].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나 레짐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은 단순히 국가의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제도는 개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나 전문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정책 의제를 증진시키고, 개별 국가들의 대외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연합관계를 형성시키는 매카니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국제환경제도가 국가정책의 변화를 유발하여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가 수준과 국제수준에서의 정책마련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19]. 이처럼 '신자유주의' 관점은 국제기구가 국가간 협력 행위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정책에 의해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제기구는 국제정치라는 게임에서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III. IAEA의 경험적 사례

1. IAEA의 형성 경과와 그 역할

1.1 IAEA의 형성 경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사용한 장본인으로써 누구보다도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핵기술 확산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동맹국인 영국의 핵기술 이전 요구에도 거절하는 등 강력한 핵비확산정책을 추진하였다. 1946년 미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루크안(Baruch Plan)을 UN에 제출하여 핵비확산을 위한 기구창설을 도모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실패하고 말았다. 소련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제관리체제의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이 안은 1948년 11월 국제연합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실질적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

미국은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 영국 등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 힘의 관계가 조정될 기미를 보이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핵비확산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제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핵기술의 확산을 일면 인정한 것으로서 미국의 타국에 대한 핵기술 제공과 수혜국가들의 평화적 핵이용을 약속받을 목적에서 제안되었다[20]. 이같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 1954년 9월 제9차 UN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국제기구 설립에 대해 7개국(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남아공, 영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이후 1956년 4월 18일 영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핵비확산을 위한 헌장 초안이 채택되었다[21]. 동 헌장의 초안은 1957년 7월 29일 관련국 모두가 헌장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헌장이 발효됨으로써 IAEA는 UN의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되게 된 것이다. 이후 IAEA의 제1차 정기

총회가 1957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어 조직 구성 및 이사국 선출이 이루어졌다. 동 총회에서는 총 10개의 이사국이 선출되었으며 준비위원회에서 지명한 13개국을 포함해 총 23개국으로 최초의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2006년 현재 회원국은 약 133개국이다.

1.2 IAEA의 역할

IAEA의 존재 의의는 NPT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하는데 있다. IAEA 주된 활동과 기능은 첫째, 원자력이 세계평화 및 보건,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활용을 지원한다. 둘째, 핵안전 기준과 지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시 비상 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을 제고한다[22]. 특히 IAEA의 통제나 감독하에 제공된 핵분열 물질이 그 어떠한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IAEA는 사찰관의 파견을 통해 관련국가의 의무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등을 명한다. 만약, 회원국이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AEA는 UN 안보리에 이를 보고한다. 그밖에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 농업, 수자원 및 산업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금, 훈련과정, 회의, 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위협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

1.3 IAEA의 안전조치 이행과 NPT체제

IAEA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중국 등이 1960년대에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핵확산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욱 강화된 핵비확산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여기에는 기존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소련 및 프랑스 등도 인식을 같이했다. 즉, 이들은 더 이상의 핵확산은 정치, 경제, 군사안보를 비롯한 국제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968년 7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56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성립시켰다. 이처럼 NPT는 제2차 대전 이후 핵에너지 및 핵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통 관심과 우려의 반영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편, NPT조약 체결 이전 IAEA하에 원자력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설립되어 IAEA 안전조치 협정 등이 당시 강대국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소련을 비롯한 인도 등 핵보유국들이 비핵보유국들(특히 중국)에게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IAEA의 설립목적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이 발생하자 미·소 두 강대국은 핵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핵비확산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1963년에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 Partial Test Ban Treaty)이 체결되어 미, 영, 소 3국간에 지하 핵실험을 제외한 핵무기 실험금지를 약속하였다.

NPT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식적인 5개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에 추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핵비보유국에게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는 핵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고 인류의 안전보장을 위해 평화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핵무기 경쟁 중지는 물론 핵군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의 제조, 획득, 관리에 대한 원조를 행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이들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이들의 영토에 대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핵 비보유국에게는 핵무기 및 폭발장치의 인수 또는 관리의 금지, 무기의 제조, 획득 등을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만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안전조치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핵분열성물질에 엄격히 적용되며, 이같은 물질 또는 장비를 핵비보유국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안전조치가 적용된다. 동 조약의 이행상황은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1980년 제2회 검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미국과 소련 양국에 대해 핵 군축의 진전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1975년

4월 86번째의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이를 탈퇴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인해 다시 복귀 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시 2002년 핵문제를 야기시킨 후 탈퇴와 복귀를 반복함으로써 IAEA와 NPT의 효력 및 기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한편, 동 조약의 유효기간은 25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 5월 11일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어 항구적인 조약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현재 NPT체제는 IAEA가 정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된 핵안전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핵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핵과 관련된 시설들이 사찰 대상이 된다. 즉, IAEA에서 규정된 국제거래에 의해 이전된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물질, 시설, 독자적 핵시설 등 제반 핵관련 시설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 반면에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 대신에 비핵보유국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NPT체제는 기존의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평등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5개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폐지하거나 감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반대로 비핵보유국에게는 새로이 그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의 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결국, IAEA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NPT는 5대 핵강대국의 핵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5개 핵강대국은 핵무기의 과점지배를 통해 핵확산을 막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NPT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을 비롯한 나머지 3개국들이 핵무기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핵기술 이전·양도를 막아낼 뚜렷한 방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써는 차선책으로 NPT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NPT체제는 형성 초기 어느정도 핵확산 방지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자 동 체제에 대

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NPT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발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비공식적으로는 이들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역시 70년대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 눌려 성공하지 못했다.

2. 북한 핵문제와 IAEA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하였고, 1977년에는 실험용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징후들을 발견한 이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으나 결정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의 전면 안전조치에 서명한 후 6차례 걸쳐 임시사찰을 받았고 사찰결과 핵폭탄의 핵심원료인 플루토늄 상당량을 추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받았다. 동시에 미신고 지역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요구 받게 되자 1993년 3월 NPT탈퇴를 선언하였다[23]. 북한의 탈퇴 선언이 있자 1993년 4월과 5월 IAEA의 특별이사회 결의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핵문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북·미 고위급간 접촉이 있었으나 핵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북한이 IAEA의 정상적인 사찰을 계속 거부하며 5MW 원자로의 연료봉 인출을 강행하자 IAEA는 6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였다. 이에 북한은 6월 13일 IAEA마저 탈퇴하고 말았다. 북한의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북핵위기가 고조되자 1994년 6월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였으며, 이후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합의에 북·미 양측이 서명하였다. 제네바 합의의 기본 골자는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비롯한 주요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이었고, NPT와 IAEA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네바 합의로 인해 북핵문제가 진정의 기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은 연두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의 테러 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방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을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24]. 또한 미국은 같은 해 1월에 발간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에서도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북한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 갔다. 이에 따라 북·미간 대립의 각은 점점 날카로워 지게 되었고,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 발표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우선 2002년 11월 15일 12월분 대북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네바 합의에 의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대북중유공급이 중단되게 되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핵프로그램 동결 해제 및 핵발전소의 가동 선언으로 대응하였다[25]. 특히 북한은 핵봉인 제거, 핵시설 감시카메라 철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원 출국 등의 강경 조치로 대응했다. 북한이 결국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및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 조치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은 1993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NPT탈퇴와 복귀를 반복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서 NPT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이 IAEA협정 위반과 NPT탈퇴 및 복귀라는 국제기구 규범에 대한 위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관련국들의 대응은 북한을 UN안보리에 이관시킨다거나 또는 각종의 대북한 봉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등의 위협 수준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NPT는 그 효용과 신뢰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NPT체제하에서 북한이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합

법적으로 보유한 후 NPT를 탈퇴할 경우 국제안보 및 정치적 측면의 문제를 제외하면 이에 대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서 있다. 2003년 이후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 비밀 핵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IAEA와 NPT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들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 역시도 IAEA와 NPT의 이와 같은 취약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적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의 가정을 중심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관한 경험적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IAEA 형성은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IAEA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패권안정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다. 우선, IAEA 형성 당시가 냉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의한 IAEA의 주도적 창설은 소련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에서이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한 바루크안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소련은 핵실험 성공 직후 미국의 IAEA 창설 제안을 전면 수용하게 된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제안 자체가 자신들의 핵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NPT체제 역시 미국을 비롯한 핵강대국간 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더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IAEA와 NPT는 일면 패권안정론을 반영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IAEA와 NPT는 핵강대국들간의 핵 기득권 공유가 그 형성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주장하는 특정 국가들간의 게임이론적 접근보다

는 핵보유국들의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국가이익 계산이 그 형성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능주의 이론도 IAEA와 NPT 형성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IAEA는 국가간 정보제공 및 거래비용, 기회비용 절감이라는 기능상 장점 보다는 핵보유국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그 형성동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IAEA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보면, IAEA와 NPT는 북한의 핵문제 발생 이후 그 역할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이 기구는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북·미간의 핵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기구가 핵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 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IAEA와 NPT에 가입 한 이후 두 번에 걸쳐 복귀와 탈퇴를 반복하였다. 그렇지만 IAEA는 이 문제를 국제기구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지 못했다. IAEA만을 놓고 보더라도 국제기구가 관련국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국가의 대외정책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IAEA의 역할은 오히려 자유주의 이론적 관점보다는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에 가깝다. 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절대적 권위체제를 지닌 중앙정부가 없다는 점에서 무정부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결코 국제규칙 또는 규범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정부적으로 보이는 국제체제하에서도 다양한 규범과 수단들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또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행동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국가간 힘의 균형을 비롯해 각종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함께 오늘날 다수의 국제 문제들이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별 국가의 절대 주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 현재의 국제사회는 20세기와는 달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과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제기구가 형성·활동하는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기능상의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오히려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협력에 의해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그 역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연합 즉, 변형된 패권안정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J.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p.485-507, 1988.
- [2] C. Archer, 김강녕 옮김, 국제기구론, 문우사, p.129, 2002.
- [3] 이상우,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p.264, 1992.
- [4] 박건영, 국제관계와 패권이론, 오기평 (편), 21세기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 도서출판 오름, p.58, 2000.
- [5] S. Strange, "The Persistent Myth of Lost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41, Autumn, p.555, 1987.
- [6] M. Friedman and A. Schwar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7] C.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17, 1973.
- [8] R. O. Keohane, *After Hegemony :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76-79, 1984.
- [9] R. Gilpin, *U. S. Power and the Multi 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S.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28, April, p.317, 1976.

[10] S. D. Krasner, "The Tokyo Round - Particularistic Interests and Prospects for Stability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3, 1979.

[11]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78, 1981.

[12] S.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pp.12-15, 1982.

[13] 로버트 잭슨, 조지 소렌스 저, 김광열 옮김, *현대 국제관계론*, 학문사, p.135, 2003.

[14] Rosecrance, Richard N,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pp.30-31, 1986.

[15] R. O. Keohane and S. N. Joseph, *Power and Interdependence :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p.87, 1977.

[16] R. Axelord and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 Oye(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7] P. M. Hass, R. O. Keohane, and Levy, M(eds), *Institutions for the Earth : Sources of Effec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ction*, MIT Press, p.193, 1993.

[18] 김태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 인식의 공유와 차이,"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pp.190-209, 2005.

[19] 스티븐 레미, 남궁곤 옮김, "현대 주류이론 :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pp.194-200, 2003.

[20] S. N. Joseph, "Sust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n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The Nuclear Reader:*

Strategy, Weapons, War, Basic Books, p.188, 1985.

[21] 류광철 외,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pp.97-98, 2005.

[22] 한용섭, "국제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 *윤영관·황병무 (공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민음사, pp.166-167, 1996.

[23] 백봉중, "북한의 핵문제의 우리의 대응,"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의 국제외교 환경*,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한국동북아시아학회 주최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p.382,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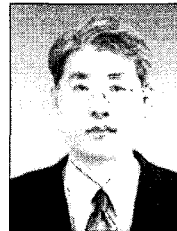
[24] *조선일보*, 정치면, 2002(1.31).

[25] 정성장·백학순 공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세종연구소, p.78, 2003.

저 자 스 개

김 태 운(Tae-Woon Kim)

정회원



- 2006년 6월 : Centre D'Etudes Diplomatiques et Strategiques in France(국제정치학 박사)
- 현재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초빙객원교수

<관심분야> : e-Politics & Law, e-Police 콘텐츠